

세월호법 정국 장기화 조짐...발목인 정치권

與도 野도 '진퇴양난'...국회파행 불가피

민생법안 처리·새해 예산심의 차질 우려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유족들이 두 차례에 걸쳐 거부하면서 정국이 한없이 꼬여가고 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도 '세월호 정국'의 장기화 여파에 휩쓸리면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새해 예산안 심의마저 파행으로 흐를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정면 돌파에 나설지, 아니면 세 번째 재협상에 나서야 할지를 놓고 '진퇴양난'에 처한 상황이다.

당내 의견도 분분한 상황여서 좀처럼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족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가족들 뜻을 받드는 안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야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여야 간 '약속'인 협상안을 준수할 것과 민생경제 법안만이라도 우선 분리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을 뿐이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현재 상황에 직면했고,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면서 "세월호 특별

법과 분리해 민생경제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주도록 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새정치연합이 유족 요구대로 여야 간 재협상의 결과물을 다시

파기할 경우 당장 정국은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이 8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해 22일부터 회기가 시작되지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분리 국감', 단원고 학생 특례입학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과 현안들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8월 국회가 검찰의 강제 구인 대상이 된 여야 의원 5명의 구속 수사를 막는 '방탄국회'로만 활용될 경우, 야당은 물론

정기권 전체에 비난이 쏟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치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야 간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8월 국회와 정기국회가 공전을 거듭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결단하고,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는 두-트랙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명숙 전 총리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흘째 단식 농성중인 문재인 의원을 방문,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국파행 속 1차 국감 놓고 여야 입장차

與 “축소 불가피” 野 “예정대로 하자”

여야 합의에 의한 1차 국정감사(8월26일~9월4일) 개시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1차 국감은 8월31일에 끝날 수밖에 없다"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까지 본회의에서 국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이후 국감 일정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6일부터 국감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 현행 국감법 2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매년

정기국회 시작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을 정하고 최대 30일 동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대상은 정기국회 개최 이후 일정이다. 여야가 국감법 2조1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할 수 있다'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없이 국감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새누리당은 다음달 1~4일 국감을 열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정기국회 시작일 이전에 국감이 이미 시작된 만큼 회기가 열렸다고 해서 본회의 의결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

“초고속 승진하러 청와대 근무했나”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1일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안을 위주로 자질 검증에 집중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경수사 공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특히 유병인 사건 때는 국가행동력이 낭비되고 과속수사도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공무원 범죄 중 경찰이 압도적인 1위고 또 늘어나는 추세"라며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써야 할 힘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의식 달레마'에 빠져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강 후보자를 포함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찰들은 초고속 승진을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는 청와대에 가는 것이 곧 승진이기에 때문에 청와대에 가는 단계에서 '절정'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추승용 의원은 먼저, 경찰대 2기인 후보자가 1기 보다 먼저 경찰대 출신 최초의 경찰청장에 임명되며 우려되는 조직 내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경찰대와 비(非)경찰대 출신 사이의 차별 논란 해소를 위한 복안을 주문했다.

강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5·16에 대해서는 "쿠데타가 맞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해 "인기 안에 매듭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드

박주선, 교육비리 공익신고자 보호 개정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21일 교육 분야의 비리에 대해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9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하여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각종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는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교육 관련 법률이 포함되지

않아 학교 비리를 내부고발한 교사가 파면당하더라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이 개정안은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고등학교법,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안전법, 학교안전법 등 교육 관련 법률을 추가해 학교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이윤석 “빛 허덕이는 수자원공사 인원은 늘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21일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투자로 인한 부채에 허덕이면서도 매년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인원을 늘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정규직 4018명, 비정규직 292명에서 현재 정규직 4239명, 비정규직 778명으로 각각 221명, 486명의 직원을 늘렸다. 특히 2008년에 비해 166%나

증가한 비정규직(계약직)은 4대강 사업에 따른 관리 인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세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자원공사의 부채 규모는 2008년 1조9000억원, 부채비율 19.6%에서 4대강 사업 이후인 지난해 14조원, 부채비율 120%로 급증했다.



김승남, “쌀 관세율 결정 특별법안” 국회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21일 쌀 관세율을 결정할 때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쌀 관세율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정부·농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인사들로 쌀 관세 합의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기구에서 관세율을 결정토록 했다. 또 정부가 쌀 관세관련 통상협상을 할 때 세부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조약을 체결하기 전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쌀 관세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쌀 관세율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회 사전동의 절차가 식량안보의 안전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선박운항자 음주단속 기준 강화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1일 선박 운항자 음주단속 기준을 현행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선박도 항공기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박의 음주단속기준도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을 계기로 선박 운항자의 음주 운항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광주지역 영업대행사 모집

부동산114와 함께 광주광역시 사업활성화를 선도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역대표 영업대행사를 모집합니다.

- 영업지역 : 광주광역시 및 전남지역
- 영업부서 : 중개사무소 광고 및 가맹영업
- 자격조건 : 광주광역시 소재 영업인력 3명 이상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포함)
- 우대사항 : 지역신문 광고영업 유경험자 키워드, 온라인 광고 유경험자
- 지원문의 및 온라인 지원
부동산114 중개채널팀 정성수 과장
TEL. 070-7011-0075
e-mail : bisu@r114.com

부동산114 부동산114 주식회사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채용공고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재단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능력 있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 합니다.

2014년 8월 22일

1. 채용 개요

- 임용예정직위 : 이사장
- 선발인원 : 1명

2. 업무 내용

- 광주신용보증재단 대표, 업무 통할, 이사회 의장, 소속직원 임명

3. 응모 자격

- 응모자격기준
 - 재단 정관 및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신용보증관련기관에서 1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기관에서 1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금융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을 의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산업·경제분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으로 전행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
 - 임용결격사유
 - 광주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1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임용 계약 및 보수

- 재단 규정에 의함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9. 1(월) ~ 2014. 9. 5(금) 17:00까지
- 접 수 처 : 광주신용보증재단 총무기획부 (☎062-950-0031, 0075)
- 우편번호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1층
-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제출 서류

- 이사장지원서(재단소정양식)
- 이력서 1부(재단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재단소정양식, 매수제한 없음)
- 직무수행계획서(재단소정양식, 매수제한 없음)
- 경력증명서 1부(직위 또는 직급, 종업원 수, 장제기록 명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자격증, 학위증, 상훈증 사본 (보유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기재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재단소정양식)
- (재단소정양식은 홈페이지 http://www.kjsnbo.co.kr 다운로드)

7. 심사방법 등

-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자를 발표(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포함)
- 면접심사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을 10분 이내 PPT 자료로 요약 발표
- 전문자격 능력, 비전제시,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층 심사
- 신원조회(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8.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한 별도 통지는 없음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및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취임 후 1개월 내에 공지지우리에 의해 재산을 등록·공개해야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총무기획부 (☎062-950-0031, 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